

특별기고



전 성 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대표 브랜드로 제시하고, 지난해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이들 과제에 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및 민간투자 21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계획은 간결하게 제시된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정리하고 있지만 28개 과제를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은 충실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는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펼쳐지고 진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정부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과제와 사업들이 적합한 장소와 시점에 적합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0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전국 17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신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설치만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적합한 추진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의 과제나 사업의 추진부처가 아니라 단순히 지방정부의 뉴딜 추진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광역협력사업이나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석회의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지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뉴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면제 또는 수시 심사제도 도입, 둘째 지방재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협의의 신속화, 셋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넷째 뉴딜사업을 보통교부세로 산정시 보정 수위에 검토 반영, 다섯째 초광역 협업 뉴딜사업 추진하는 우수 지방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특별 지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지방재 한도 초과 발행의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의 간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방재 발행요건을 완화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 지방재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뉴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을 인상 및 초광역협력 뉴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 것이고, 각 부문의 과제나 사업이 전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체계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환경문제가 심화되며, 견고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대전환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기존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지역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운영 및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의정칼럼



최 선 국

전남도의원(목포3)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카페와 PC방,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 원인들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박쥐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서식지를 넓히며 인간과 가까워졌고, 결국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는 병원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하기도 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쉽게 적응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사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창궐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인간들의 활동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개발·개척

때문에 야생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서식지가 파괴되자 야생동물과 생활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와 경제성장의 결과물이다. 화석 연료 채굴, 무분별한 개발, 자원 사용, 해양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초래하였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공공동체로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생산공장이 휴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일시적 현상일 뿐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경제금융위기 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줄어 들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속에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배달음식 등의 주문 증가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바이러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이기도 한 해상교통망, 항공교통망이 축소될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는 선진국일수록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바이러스와 온실가스 문제는 미려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고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만 우선시 하는 풍토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경제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있었던 온실가스 배출 감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소해야 한다. 이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노력만으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써 이를 하루빨리 상용화해야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활성화,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로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린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신인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을 추진한다. 그린 수소생

태계를 구축해 그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수많은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향형 그린 뉴딜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 중 전라남도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선포한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전략 등 통합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주시 인근 전남 경남 10개 시군에 공동 유치해 대한민국을 기후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함으로써 K방역과 같이 전 세계에 국격을 높이고, 전남과 경남이 남해안 공동체로서 상생과 지역발전 도모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민들도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위기가자 기회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위기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社 說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의견까지 살펴야

나주 죽산보가 해체된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논란 끝에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국가물관리위가 이를 수용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승촌보는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 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도 병행한다.

죽산보의 경우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죽산보가 생겨나면서 수자원 활용성도 좋아지고 경관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펼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환경단체도 다소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승촌보도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등의 정책을 막힘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시작됐다. 영산강을 비롯해 한강·낙동강·금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총 22조2천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 완공됐지만 환경 훼손 등의 다름이 지속돼왔다.

앞으로 죽산보 해체는 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결정된다. 환경부는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제안사항을 함께 추진한다.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은 문제인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자연성 회복의 큰 방향을 정립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논거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겠다.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에 바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청정 전남의 마을 분위기를 되살리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주민이 직접 주도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가 그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처음 종합계획을 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핵심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바다와 강, 태양, 갯벌 등 청정 자원 관리·보전과 함께 이웃간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블루투어(Blue Tour)를 완성하기 위해선 주년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원(도비 108억, 시군비 162억)이 투입되며, 3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관개선 등 3대 분야로 구분돼 추진된다.

도는 환경 경관 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포상을 통해 시책 참여도를 제고하며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할 방침이다. 사업 계획

부터 추진, 사후 관리까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높여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배어있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올해 도는 역점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한다. 침체된 마을 살리기가 어쩌면 단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순환을 위한 발판을 다져야 한다.

주민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공동체는 더욱 돈독해진다. 모두의 공동 공간으로 마을의 개념을 확장하고 환경을 자유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참여의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

코로나 시대, 잠재된 농어촌 마을의 가능성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발전 모델로도 가치를 지닌 때문이다. 전남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천혜의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일본 수출비중 3년 만에 다시 5% 아래로…코로나 여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다시 5%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력 제품의 일본 수출길이 좁아진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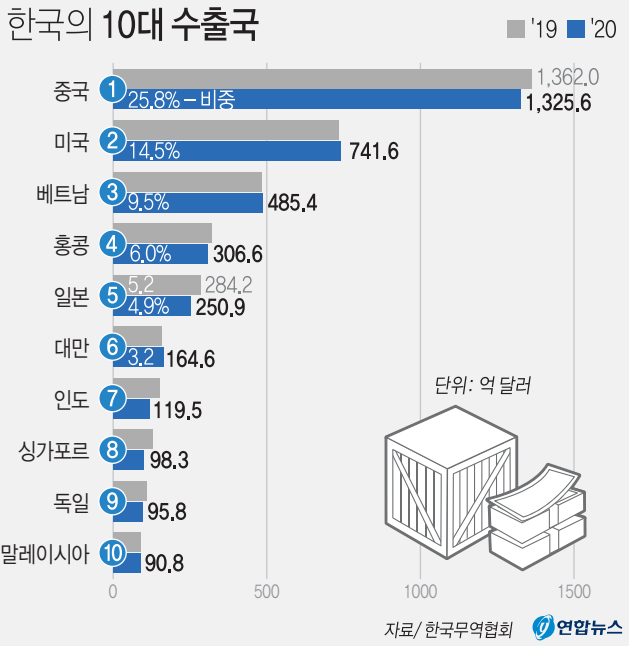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250억9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에서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 아래로 하락했다. 일본 수출 비중은 2015년(4.9%) 처음으로 5%를 밑돌았고 2017년엔 4.7%까지 낮아졌다. 이후엔 2018년 5.0%, 2019년 5.2%로 다시 5%대를 회복한 바 있다.

일본은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1973년 대일본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1988년에는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2001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두 자릿수 비중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중국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김경호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지난해 일본 수출 비중이 작아진 데는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범죄 연결고리 랜덤 채팅앱 인증강화 시급

‘랜덤 채팅 어플’ 일명 랜챗! 최근 젊은층에서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 및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어플이다. 얼마전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또 지역 연쇄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범죄 경로로 랜챗을 활용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상당수 랜덤 채팅어플이 실명 인증 등 가입절차가 허술한데

다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범죄 은상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랜챗 설치 시 가입자의 성별과 거주지역, 나이 정도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허위 신상 정보를 입력해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즉석 만남을 갖을 수 있는 GPS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1천4

00여명의 랜챗을 통한 성매매 사범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실제 또 지역에선 랜챗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된바도 있다.

다만 참고 자료도 없는지 더 살펴보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은 약 340여개로 이중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은 약 13%에 불과한 46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약 13%를 제외한 나머지 랜챗은 본인 인증 절차가 생략된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자들이 랜챗을 통해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을 상대

로 채팅을 유도한후 음란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몸캠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아 자유로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순 없지만 랜챗의 특성상 허술한 가입 절차와 더불어 신분을 속이고 불특정 다수와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성매매 알선 및 불법행위 연결고리로 전략할 위험이 많다.

랜덤 채팅 어플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본인 인증 강화 및 주적적 점검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덕형 청정경찰서 정보안보조사>